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 漁港消息

발행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익산동 705-9  
인쇄인 3459 TEL. 568-6651~2  
등록번호: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1] 1996年 6月 25日(火曜日)

THE FISHING PORT NEWS

第102號

(月刊)

## 水產界 '해양부' 名稱에 크게 반발

### 그동안의 政策 소외 轉換 위한 「海洋水產部」 촉구

#### “海港·水產廳 조직 均衡이 뤄야”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 보전 정책을 전달할 「해양부」가 신설된다.

신설될 해양부는 기존의 해운항만청, 수신청, 해양경찰청을 통합하고 건설교통부의 수로국 및 해난심판원,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기능, 통상산업부의 해양자원개발기능, 과학기술처의 해양연구조사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제1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해양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부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5대 개원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개정안을 처리, 8월중에 해양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수산계에서는 해운업에 비해 복잡하고 광범

위한 수산업을 한 부처에서 조화롭게 융화, 발전시키고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어업인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신설부의 명칭을 「해양수산부」로 해야하며 해양수산부 조직은 기존 해운항만청과 수신청의 조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

또 초대 장관에는 수산관련인을 임명하는 것이 2백 12만 수산인의 생존권 보호 차원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의 경우는 수신청 조직이 어정부, 해양어업부, 진흥부, 어항부, 연구부 등 5개 부가 있음을 미루어 최소한 그런 수준으로 국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률 지속시키고 어항개발과 연계, 이 성과를 높혀 나가야 할것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어업인들도 농특세가 국민의 성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 漁村·漁港 개발 效果 現場 점검 통해 確認

수신청이 추진중인 어촌 어항개발사업으로 어촌을 떠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마을부녀회가 구심점을 찾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에 어업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8

일부터 31일까지 이정환 청와대 농어촌담당 비서관을 단장으로 수신청, 수산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어촌 어항개발사업실태 현장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다.

점검단은 마을마다 육상 소득원 시설을 1개소 이상 건립, 운영토록해 마을의 활

明年 어항豫算案 올보다 24.6% 增額요구

## 2千74億9千6百만원 規模

### 機能, 福祉시설 民資유치로 推進

수신청은 내년도 어항건설 예산으로 일반회계 6백59억9천5백40만원, 특별회계 1천4백15억56만원 등 총 2천74억9천5백96만원(금년비 24.6% 증액)을 예산 당국에 요구했다.

이중 1·3종 어항 시설비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1천4백95억 원, 2종어항은 11.7% 늘어난 4백30억원(지방교부금 50% 포함)을 계상했다.

수신청은 어촌 정주권의 핵심기반으로 되는 어항을 사

회간접자본 시설로서 어획물의 양류, 어선의 안전 정박, 선수품 보급 등을 위한 기본 시설 우선투자에서, 어항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종합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신청은 급유 급수, 제빙 등의 보급시설과 처리 가공시설을 포함한 기능시설과 복지시설은 수협 또는 민자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신청은 이와함께 어항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편

의 증대를 위해 안전진단, 정비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지보강사업도 확대해 나갈

### 漁港시설 執行要領 公務員 복무規定 개정

수신청은 효율적인 어항개발을 위해 용역감독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어항시설사업집행요령 및 관계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수신청은 우선 어항시설 사업집행요령 및 관계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명칭을 「어항시설사업관련업무집행요령 및 관계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역감독관의 업무, 용역계약자 제출서류, 현지확인 및 점검대상업무, 공정등 각종 보고사항 및 관리서식 등 용역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 1997년도 어항건설 예산 요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97요구(A)	'96예산(B)	증(△)감(A-B)	%
계	207,495,960	166,488,899	41,007,061	24.6
(일반회계)	65,995,400	39,388,899	26,606,501	67.5
1·3종어항	65,995,400	39,388,899	26,606,501	67.5
시설비	54,000,000	38,477,000	15,523,000	
부대경비	11,995,400	9,118,899	11,083,501	
(농특회계)	141,500,560	127,100,000	14,400,560	11.3
1·3종어항	98,500,560	88,600,000	9,900,560	11.2
시설비	95,500,000	86,060,000	9,440,000	
부대경비	3,000,560	2,540,000	460,560	
2종어항	43,000,000	38,500,000	4,500,000	11.7
(지방교부금50%포함)	149,500,000	124,537,000	24,963,000	20.0
시설비 소계				

재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재원이 어촌의 종합개발과 어항개발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안도로를 건설한 결과 고흥군 풍남면의 경우 그 도로주변에 횟집과 숙박시설 등이 신축되기 시작, 민자유치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완도군 신지면은 이 사업으로 건립한 숙식시설을 마을 부녀회가, 주차장은 마을 노

인회가, 유료낚시터는 마을 청년회가 각각 맡아 관리함으로써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어항개발사업의 경우 내발행은 92년부터 94년까지의 투자액은 연평균 7억원에 불과했으나 농특세가 새로 생긴 95년과 96년에는 각각 32억원과 24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이 어항을 이용하는 현지 어선 79척과 연간 5천1백 척의 외래선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임이 확인됐다.

아 먼만 해양을 향한다면 이 보다 더 큰 모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로 발족되는 부의 초대장관은 수산인 가운데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외형으로만 보면 해운, 항만 관련업무가 데치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업무는 매우 단순한 편이다.

한편 수산업은 우선 2백12만 수산인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전체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의 측면에서 그 미

## 수산업을 포기할 것인가

### ‘해양부’ 신설 정부조직 이대로 좋은가

세계 최초로 수산자원저장제도를 실시한 뉴질랜드는 지난해 농업수산부를 농업부와 수산부로 분리, 그 기능과 지위를 강화했다.

그런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수산업 여건이 이를 나라보다 결코 뛰어지지 않는 우리나라민이 스스로 수산업을 포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증거의 하나로 우선 부처의 명칭에서 편린을 염불 수 있다. 「해양」과 「수산」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족하는 부처 명칭을 해양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과거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양부로 했다면 이는 치기어린 낭만적인 생각이다.

대대로 수산업을 영위해 온 2백 12만의 수산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최근 수산업이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절반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을 진흥한답시고 전국 해안에 각종 오염된 폐수를 퍼부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바다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었기에 그러하다.

혹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국가 정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구축은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처명칭부터 「해양수산부」나 「수산해양부」로 바꾸어 정부가 수산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고전적인 명언이 있지만 문전옥답같은 연안 바다는 포기하고 보이지도 않는 신기루를 좁

## 「수산해양부」 개칭부터 규모보다 「수산영향」 고려할 때

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두루 이어지기 때문에 수산인의 초대장관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함께 이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르긴 해도 수년전부터 은밀히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수산인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만에 하나 수산업 경시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바 이런 불필요한 신경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수산인 출신 초대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 부 조직을 구성할 때 기존의 수산업 조직이 탄력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치 부처 통폐합에 따른 힘겨루기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해운, 항만에 비해 복잡다각한 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형만을 비교하여 업무의 주요 유무를 따지고 듣다면 나무는 보드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단언한다.

또한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큰 부분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은 부분의 동질성만으로 무조건 통합하는 것은, 세분화·전문화 등으로 21세기 기준에 맞는 신경전에서 크게 빛나가는 풀이 될 것이다. 산하단체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히려 세분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어쨌든 기왕에 정부가 작성한 부처 개편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결론이 나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바로 이런 때 국민의 소리를 경허하게 듣는 것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사진으로 보는

# 日本·뉴질랜드·豪洲등 先進어항어촌

## 제8차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 성료

제8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단 39명이 9박10일 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지역의 어항어촌을 시찰, 큰 성과를 거두고 지난 6월 12일 무사히 귀국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찰에는 수산청을 비롯한 각 시도 어항관련 공무원과 시공 기술용역회사의 임직원, 수협 조합 임직원 등 정책입안, 기술용역, 시공, 이용관리 분야에서 폭넓게 참여, 선진 어항어촌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봄으로

써, 국제적 시견을 높이는 한편, 시찰국 어항관계자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했다.

이번 시찰단은 예년과 같이 시찰국 어항관계자의 각별한 배려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찰을 마쳤다.

특히 일본전국어항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의 어항관계자로부터 시찰어항의 항세, 시공기술, 시설현황, 관리방법 등 상세한 설명과 안내 팜플렛 화보 등 기술정보 자료를 제

공받았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촉진은 물론 어항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해안정비, 관광어항어촌 개발 등 새로운 정세에 대응할 어항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매년 시찰 단을 파견하고 있다.

### ① 일본 三崎어항

三崎어항은 三浦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앞쪽에 가로가시마가 있어 자연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의 양항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三崎어항은 연안어업, 근해어업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참치어업을 중심으로 한 원양어업의 기지인 동시에 태풍시 긴급 대피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小田原어항

小田原어항은 神奈川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배후에는 국제적 관광지인 箱根山, 서쪽에는 湯河源온천 등을 두고 있어 산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小田原어항은 1968년 제3차 어항정비계획에 의하여 기본시설이 완성되었고, 대형어선과 소형어선의 이동조정을 위해 1970년도에 제4차 정비계획에 의하여 새로 외항을 신축하였다.

### ③ 三崎어시장

三崎어시장은 1922년 三崎부근에 개설되었으나 관동대지진으로 1929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그후 수차례 걸친 어항정비 확장이 진행되는 동시에 어선이나 어법의 근대화와 어획량의 증가에 따라 1968년에 시장을 전면 개축하여 규모와 기능을 확대했다. 1922년에는 어시장제빙 공장, 초저온어시장냉장고를 건설했고 1994년에는 신어시장이 완성되어 현재의 시장업무 대부분이 신어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시설부지면적 20,954m<sup>2</sup>, 제빙능력 100톤/일, 저빙능력 200톤, 냉장 실수용능력 5,400톤, 냉장온도 -40℃~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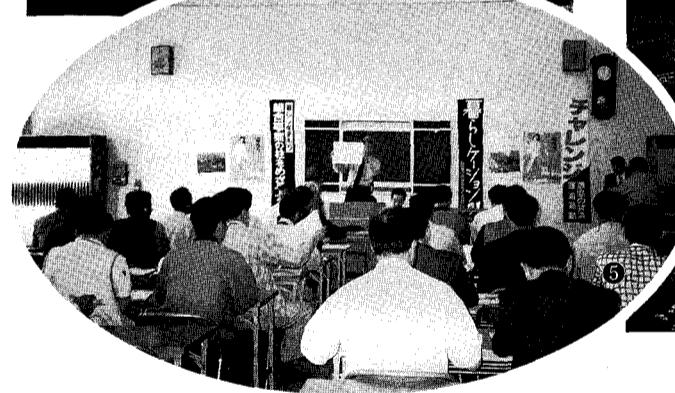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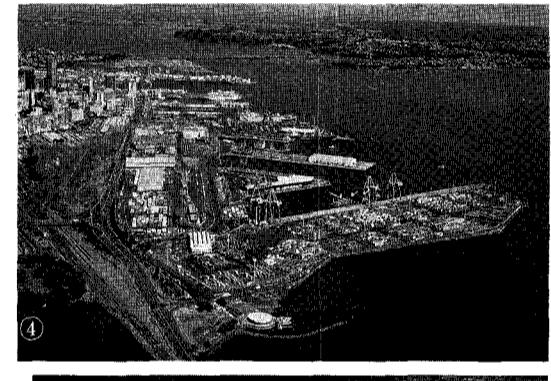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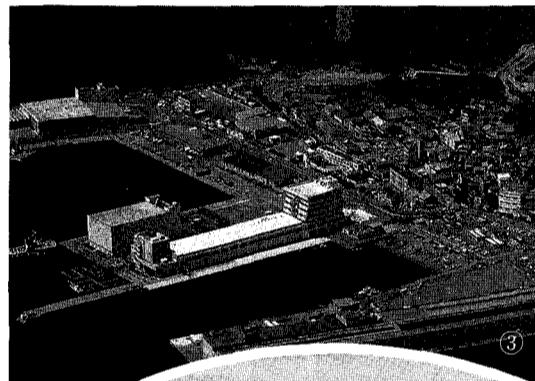
### ④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뉴질랜드는 특별히 어항과 항만의 구분이 없으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리 이용하는 복합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항은 요트정박항에서부터 어항, 여객선항, 컨테이너항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규모를 개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 ⑤ 시찰항 현지 관계자로부터 항세, 건설현황, 이용관리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시찰단 일행

### ⑥ 호주 시드니항

시드니항은 세계 3대 미항으로서 이미 50~100년전부터 기본시설을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어항사업비로 약 2천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시드니항은 오퍼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정화, 외래로 배출하기 때문에 항내 오염원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 入札·下都給관련제도 先進化

## 金대통령 不實시공 입찰 부조리 척결 당부

김영삼 대통령은 6월 18일 “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과 하도급관련제도를 선진화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대표 1백 8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시책을 조속히 강구 토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의 건설부문이 국민총생산의 20%수준을 차지하고 세계 8위의 해외건설활동을 펼 정도로 크게 성장했으나 건설

업계에 아직도 부실공사나 입찰부조리와 같은 비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실시공을 저지른 업체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최근 SOC투자를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늘어날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올해를 ‘해외건설 재도약의 해’로 만들도록 건설업계가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해외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건설

업계 대표들은 부실시공 척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자금난 및 인력난과 같은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없는 지원과 규제완화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 建設業範圍 대폭 擴大 건교부, 法制定 뜻 밝혀

지금까지 토목 건축의 시공부문으로만 제한돼 온 건설업의 범위가 앞으로는 설계 감리를 포함한 각종 엔지니어링과 전기 통신 등 유관

공종, 그리고 개발형 자체공사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업 면허를 아무때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준설 등 특수면허가 전면 폐지돼 전문공사업종으로 흡수되며 대규모 복합공사에 건설관리(CM)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면허 간에도 하도급을 허용하는 등 중소건설업 지원규정이

마련되고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가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제정 방향을 밝혔다.

## 공사契約要請제도 废止추진

### 建設制度개혁 長期과제로

발주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 시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기관 계약요청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전문계약 대행기관(예 CM社)을 활용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건설제도 개혁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조달기관은 자체집행이 어려운 수요기관의 공사계약이나 각종 이용시설과 같은 일부 민간부문의 공사계약, 기타 물품구매

증정집중발주제도 하에서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불리해 클레임 처리 등 공사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 계약요청제도를 폐지해 공사집행을 수요기관별로 자율 시행하되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해 자체 집행이 어려운 기관만 중앙조달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돼있다.

동

정



田允喆 수산청장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  
▲ 배화감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11일 대한필각회 정기 간담회에 참석.

▲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광주 케이블 TV네트워크 개국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5일에는 문화원 도지회 기관장 조찬회에 참석, 7일에는 광주학생운동유공자 후손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12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7차 지역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전국갱생보호회 월례회의에 참석, 2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6년도 상반기연찬회의에 참석.

▲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6월 5일 광주매일신문 창간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13일에는 신문협회가 주관한 하기 장병위문행사에 참석.

▲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업시찰차 중국 북경지역을 방문, 6월 12일에는 21세기정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13일에는 능률협회가 주관한 환경부 장관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 20일에는 96년도 건설진흥총진대회에 참석.

▲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 상임위원회의에 참석, 14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정기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건설진흥총진대회에 참석, 26일에는 도산학술연구원 월례포럼에서 「건설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현안문제」를 주제로 강연.

▲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충북협회 정기총회를 개최.

▲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12일 제주도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7차 지역회의를 개최.

▲ 송재성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 회장은 6월 17, 18 양일

간 광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 인 사

▲ 수산청장 비서관 김영조

## 주 소 변 경

▲ 김용식씨 (주식회사 다산컨설팅트 이사)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3번지 신동아아파트 3동 1111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3473-5362.

## 회 비 납 부

- 감사합니다 -

## ■ 단체

▲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고제철)

▲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회장 고세진)

▲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 황금주)

▲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 장정언)

▲ 주식회사 삼건사 (회장 정덕용)

▲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 (사장 박성태)

▲ 주식회사 대야건설 (사장 이정균)

▲ 합자회사 대한토건사 (사장 전기섭)

▲ 주식회사 한녕엔지니어링 (사장 김한영)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수인)

▲ 화성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종국)

▲ 강화군수 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용렬)

## ■ 개인

▲ 임종국씨 (수산청 차장)

▲ 김영환씨 (전국수산물중매업협회 전무이사)

▲ 차상희씨 (제네랄델리카 서울지점장)

▲ 김의중씨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 정철희씨 (방산정밀화학주식회사 회장)

▲ 백운영씨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 김재극씨 (주식회사 문원사 사장)

▲ 이현수씨 (동신참치당산점 사장)

▲ 조사연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

▲ 배길중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 서성룡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 조동영씨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 기호준씨 (수산청 관리과)

▲ 김용덕씨 (수산청 남해어항사무소)

▲ 정동호씨 (청와대 민정비서관)

▲ 권오윤씨 (주식회사 제약사장)

▲ 김일제씨 (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 조우연씨 (수산청 시설관리국장)

▲ 배평암씨 (수산청 생산국장)

▲ 이용숙씨 (수산청 총무과장)

▲ 민병훈씨 (수산청 공보담당관)

▲ 김시문씨 (전 수산청 차장)

▲ 주홍장씨 (신라교역주식회사 상임고문)

▲ 이재현씨 (주식회사 평원엔지니어링 사장)

▲ 최재학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 김기옥씨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

▲ 김하섭씨 (국립수산물검사소장)

▲ 김기홍씨 (전 수산청 과장)

▲ 송중석씨 (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서승남씨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황찬우씨 (전 수산청 근무)

▲ 박지원씨 (삼일중기 사장)

▲ 하성환씨 (전 수산청 차장)

▲ 정병삼씨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 정해택씨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소장)

▲ 김홍배씨 (전 원예정보시스템 상임고문)

▲ 손팔원씨 (국립수산진흥원 제주수산연구소)

▲ 김현주씨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기원씨 (임덕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

▲ 장봉환씨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 회장)

▲ 이준양씨 (수산청 청어선과)

▲ 이상철씨 (전 대성특수제지 주식회사 사장)

▲ 김남형씨 (제주대학교 교수)

▲ 강국희씨 (유한회사 신원종 합�建설 사장)

▲ 정대연씨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이사)

▲ 황재수씨 (한국수산신보사 사장)

▲ 김기수씨 (인간문화재)

▲ 김윤수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소장)

▲ 신영태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공일씨 (주식회사 한아엔지니어링 사장)

▲ 이정식씨 (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박덕만씨 (수산청 기획관리관)

▲ 황철민씨 (수산청 관리과)

▲ 김익수씨 (수산청 총무과 경리계장)

▲ 김영수씨 (주식회사 한아엔지니어링부장)

▲ 이종만씨 (주식회사 새건설 사장)

▲ 이신복씨 (대한어망협회 전무이사)

▲ 피경만씨 (주식회사 금촌건설 부사장)

▲ 김용식씨 (주식회사 다산컨설팅트 이사)

▲ 안익성씨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차장)

▲ 이창기씨 (전 수산청 과장)

▲ 이경희씨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관리과장)

▲ 박원길씨 (수산청 남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

▲ 임무성씨 (삼일건설주식회사 회장)

▲ 장동익씨 (팔보농수산주식회사 사장)

## 부 읍

▲ 김홍철씨 (수산청 기획관리관)는 6월 9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남 남해군 산동면 봉화리 선영.

## 실적공사비 積算공사

## 10월이전 示範發注

정부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전환방침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 이전까지 공공시설공사 16건이 이 방식에 의해 시범 발주된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오는 99년부터 모든 공공통신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를 반영기로 방침이 섬에 따라 우선 건교부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16건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실제 투입되는 비용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를 예정가격으로 활용한 후 명확한 기준이 작성되면 내년부터 이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재정경제원, 철도청, 해운항만청,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산하 11개 기관 관계자를 참석시켜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세부 추진 일정도 마련했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제도가 처음 적용될 사업은 서울 대전 원주 이리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2건씩,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1건씩 모두 16건이다.

시범대상 공사는 각 발주 기관별 실무작업반의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0월사이에 발주된다.

건교부는 올해 시범발주에 따른 예산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행정지시를 추후 하달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발주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 영업안내

- 해외여행 알선 (개인, 단체, 효도관광)
- 여권 및 각국비자수속 (무료 대행 신속 정확)
- 국제선 항공권 판매 (세계 각국)
- 해외유학, 연수 안내 (세계 각국)
- 호텔 및 리조트 예약 (세계 각국)
- 해외 교통편의 제공 (기차, 선박, 버스, 리무진 등)
- 해외 신혼 여행 (결혼 기념 등)
- 성지 순례 안내 (안식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 (주) 새한월드여행사

代表理事 許順寧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3-21호

TEL: (02) 538-0898 (代) FAX: (02) 552-8044

긍정적 사고·적극적 행동





## 물에 빠졌을 때

우선 평평한 곳에 눕하고 호흡 맥박 주의  
호흡 멈췄을 땐 심장 마사지와 인공 호흡

어떤 사고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익사하고 사고 직후의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면 우선 적당한 곳에 눕하고 우선 호흡과 맥박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과 심장이 다같이 멈쳤을 때는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부터 서둘러야 한다.

호흡이 멈쳤을 때는 아무데서고 우선 입에 대고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는 인공호흡부터 시킨다. 의식이 회복되면 다음에는 마실 것을 준다. 따뜻한 물, 커피, 흥차 같은 것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적당한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인공호흡이라고 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입, 코로 직접 숨을 불어넣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먼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를 유지한 후 한쪽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크게 불어넣거나 혹은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불어넣어도 된다. 이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숨을 계속 불어만 넣을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쉴 틈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동작을 처음 몇 번은 빨리 시행하고 대개 1분간에 10~15회 호흡을 유지해 준다.

인공호흡 도중 환자가 토했던 것 같은 기색이 보이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 물을 토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어졌던 환자가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면 재빨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심장마사지는 익사, 가스중독, 질식, 감전 등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쳤을 때 3~4분이내에 혈액순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뇌나 심장이 기능을 잃게 되므로 이때는 1초라도 빨리 심장마사지를 해야 한다.

심장마사지를 위해서는 딱딱한 바닥에 얹은 깔개를 깔고 환자를 바로 눕히는 것이 중요하다.

팔꿈치를 쪽뻗은 채로 상체에 체중을 실어 환자의 흉부가 3~4cm 가량 들어갈때까지 눌렀다가 손을 뗀다. 환자가 초등학생이면 한손으로 세 살이하의 어린이라면 손가락 2개로도 가능하다.

대개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동시에 멈추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환자서 할때는 심장마사지 4~5회(1초에 1회) 인공호흡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만약 보조해줄 사람이 있다면 한사람은 5초에 1회정도로 환자의 입에다 직접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숨을 불어넣자마자 다른 한사람은 심장마사지를 1초에 1회의 비율로 5회 계속하는 식의 협동 작업으로 되풀이 한다.

2~3분마다 맥박을 짚어보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심장마사지는 중단하고 인공호흡만 계속한다. 뛰기 시작했던 맥박이 다시 멈추는 경우도 있으므로 맥박을 비롯하여 상태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어졌던 환자가 맥박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면 재빨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환경과 환경오염

환경이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을 말하며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이러한 환경이 오염물질로 더럽혀지는 현상 또한 상태를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자연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자연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

환경오염 내지 자연파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연계의 환경용량에 비하여 그 오염행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오염현상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그후 과학기술의 발달, 이로 인한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 도시화, 인구의 증가 등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기름진 땅으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 주었지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물과 공기는 물론 땅까지도

### 2.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기는 주로 난방, 자동차운행, 산업용 열공급 등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며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SO<sub>x</sub>), 질소산화물(NO<sub>x</sub>), 일산화탄소(CO), 먼지, 옥시탄트(Ox) 등이 있다.

물은 가정의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농촌에서의 축산폐수나 비료 농약 등의 영농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발생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오

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피해를 입게된다.

### (환경오염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란 유기물질이 물속에서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산소의 양으로서 mg/l 또는 ppm으로 표시된다. BOD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기물질로 많이 오염된 것을 뜻한다.

- PPM이란 백만분의 1단위로서 수질오염에서는 1mg/kg 1mg/l, 대기오염에서는 1cc/1,000l의 오염물질 농도를 1ppm으로 나타낸다.

- 예컨대 10드럼(2,000l)의 공기속에 티스푼(2cc) 하나정도의 나쁜 공기가 섞여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산성비란 공기중에 떠있는 황산화물(SO<sub>x</sub>)이나 질소산화물(NO<sub>x</sub>)이 비에 섞여 산도가 높아진 빗물로서, 이는 식물 꽃가

### 어·항·교·실

# 漁港計劃樹立의 要領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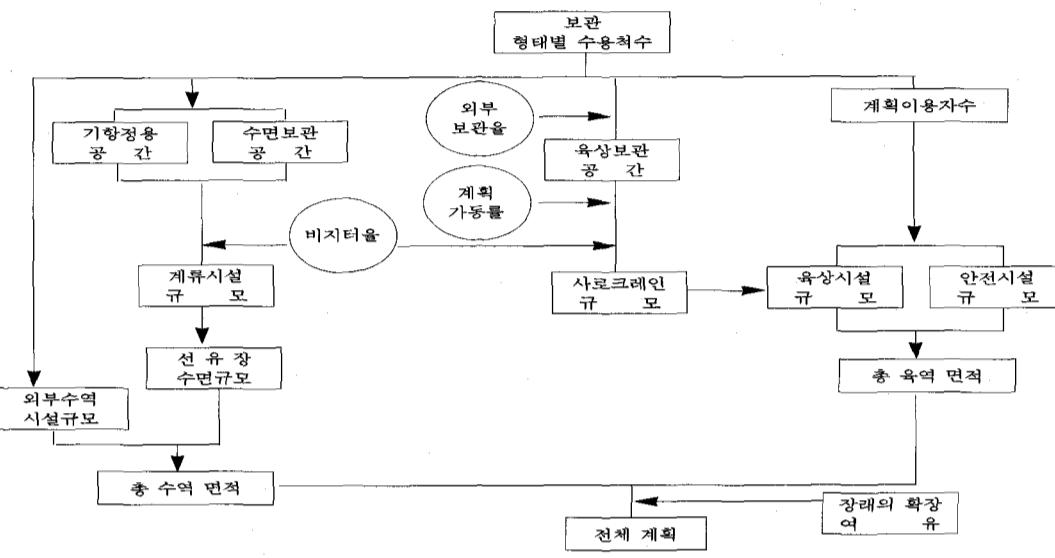
## 피셔리너의 計劃

(3) 계획구모의 설정  
제 시설의 규모결정의 흐름은 그림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형태별 수용척수, 이용자수 등에서 결정된다. 형태별 수용척수는 계획지의 지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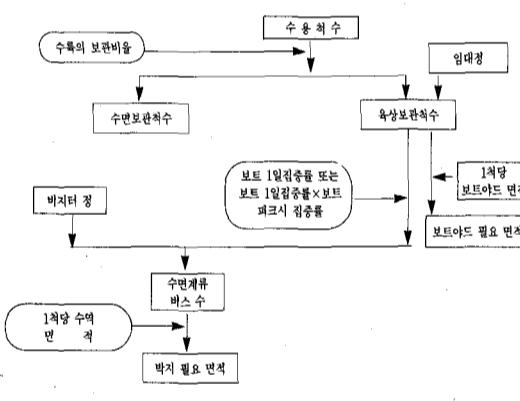
건 등으로 크게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에 대하여는 도입기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시설조정도면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보트야드, 박지, 주차장의 것으로 한다.

규모결정의 흐름을 그림 2,3에 제시한다. 이들 흐름은 표준적인 것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충분한 조사분석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1)



(그림 2)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 10년마다 자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에 걸쳐 지형 아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 애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 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애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수출입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1) 환경기준의 설정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상의 기준이 환경기준인데 각종 오염규제시책은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2) 배출허용기준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당해사업장 밖으로 폐수 또는 가스 등의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말하며 배출규제의 핵심요소로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上)

### 항만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생 활 정 보